

## 영리병원 No, 출자개방형 병원 Yes

최근 대한네트워크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선진화와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박인출 협회장이 눈길 가는 제안을 하나 했다. '영리의료법인' 대신 '출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것이다. 요지인 즉 '영리(For-Profit)'라는 단어가 파생시키는 오해가 너무 크고 깊어 도무지 의료산업화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으니 말부터 바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박 회장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영리의료법인이란 용어는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우리 의료기관이 비영리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비영리의료기관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이다. 이는 우리가 병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다른 모든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한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런 점에서 비영리의료법인이란 말은 위선적이고 부정확한 수사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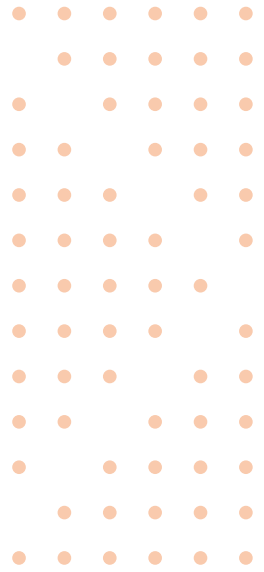
글·노원명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wmnoh@mk.co.kr

실상 영리의료법인이란 용어는 병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데 반해 비영리병원은 재투자 또는 내부 유보금으로 축적해 놓아야만 한다. 배당을 하든, 재투자를 하든 어쨌든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는 본질적으로 영리이다. 자본주의는 영리행위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고 당연히 병원도 그렇다.

비영리란 용어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다. 사농공상의 전통 탓인지 아니면 국민성 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 ‘영리’는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무시무시한 것이다. 반면 영리가 아닌 것은 따뜻하고, 가치있고,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다. 비영리법인이란 말은 마치 종교 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 준하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자’고 하면 이는 마치 송고한 슈바이처 박사를 잇속이나 챙기는 장사꾼으로 타락 시키는 듯한 주장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 의사에 대해 슈바이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평소에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영리병원으로 바꾸자고 하면 쌍심지를 쏜다.

그런 점에서 출자개방형 병원은 사안의 본질에 보다 근접한 표현이다. 비영리병원이 자기자본 또는 금융기관 대출로 병원을 짓는데 비해 영리병원은 일반인의 투자를 받아서 짓는다. 그렇다면 영리, 비영리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출자 허용이냐, 비허용이냐가 구획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물을 달리 칭할 때는 바로 그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작명의 기본이다.

영리병원이 별로 호응을 못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를 의료민영화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형해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며 미국처럼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영화 ‘식코’의 비극이 현실화되리란 가정이다. 영리병원의 도입과 공보험 체계의 붕괴 사이엔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박인출 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하에서도 출자개방형 병원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며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전제될 필요도 없다”며 “어떤 진료 분야가 투자 수익성이 있을지는 투자자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실제 의료산업화가 민영화를 불려오리란 실증적 근거는 없다. 의료산업화와 민영화의 관계 설정이 꼭 미국형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는 곧 민영화로 이어진다. 원칙에 구멍이 나면 댐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라는 식의 논리를 편다. 이들의 주장은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대한 지나친 피해의식과 논리적 비약의 결과물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이후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은 ‘촛불’의 검열에 직면해 있는데 의료도 그중 하나다. 이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입도 벅긔 하지 않았건만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영화 ‘식코’를 현실화시킬 것”이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그 논거를 추적해보면 의료산업화를 은근슬쩍 의료민영화로 둔갑시키는 논리의 오류가 발견된다.

잘못된 논리라도 대중이 믿으면 현실이 된다. ‘현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싫다’는 대중을 상대로 ‘영리병원’이라는 말을 자꾸 해박야 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누구의 말마따나 ‘디지털 포퓰리즘’이 판치는 이런 때에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정확한 용어와 분명한 개념을 갖고 원칙을 따지고 드는 투지가 있어야 한다. 정언정명(正言正名)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 **KHA**